

오리 사육시설 개편 '선택 아닌 필수'

2017년 시범 실시했던
오리농가사육제한
올해 겨울로 3번째...정례화?



2011년 1조4,000억원
기록하던 오리산업
6년만에 생산액 40% 급감



오리산업 피해 아랑곳하지 않는
입식금지
임시방편적 탁상행정 불과



2010년부터 거의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한
고병원성 A(조류인플루엔자)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산업은 무엇일까?

2011년 생산액 1조4,000억원을 기록한 오리산업은 반복된 시로
상승세를 타던 오리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줄지어 문을 닫으면서 꺾이기 시작했다.

2017년 오리 생산액은 8,700억원으로 단 6년만에 40%가 급감했다.

꺾인 오리산업 만큼 소비자들의 인식이 반감됐다.

시의 주범인양 낙인찍힌 오리산업은 급기야 2017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겨울철 오리농가 사육제한 사업이
올겨울 3번째 시행되면서 정례화 되가는 모양새다.



일명 오리사육 휴지기제는 사육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리수급불안에 따른 가격불안 정으로 오리산업 자체를 휴지, 쉬게 하고 있다.

오리사육 제한, 과연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언제까지 오리사육을 제한해 질병을 막을 것인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모자라 소를 아예 키우지 않는 것이 답일까? 외양간을 잘 고치는 것이 제대로 된 답은 아닐까?

오리사육제한, AI 방역 해답될까?

최근 오리산업은 2010년부터 거의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한 AI에 따라 수급불균형과 가격하락 등 불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으로 인한 수급불균형 이외에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SOP 개정에 따른 규제 강화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17년부터 첫 시행한 겨울철 오리농가 사육제한은 올해 3번째 시행됐다. 문제는 지자체장에 대한 사육제한 명령권 부여로 대대적인 사육제한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출하 후 휴지기간 14일 일제 입식 및 출하 준수로 생산량 급감에 따른 큰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내 AI 발생현황>

구분	'03/'04년	'06/'07년	'08년	'10/'11년	'14/'15년	'16/'17년	'17/'18년
시기	'03.12.10 ~'04.3.20 (102일간)	'06.11.22 ~'07.3.6 (104일간)	'08.4.1 -5.12 (42일간)	'10.12.29~ '11.5.16 (139일간)	① '14.1.16~7.29 (195일) ② '14.9.24 ~15.6.10 (260일) ③ '15.9.14 ~11.15 (62일)	① '16.3.23~4.5 (13일) ② '16.11.16 ~'17.4.4 (140일) ③ '17.6.2~6.19 (17일)	'17.11.17 ~'18.3.17 (121일)
발생 유형	H5N1	H5N1	H5N1	H5N1	H5N8	H5N8 H5N6	H5N6
발생 건수	19	7	98	53	38	419	22

※ 국비 소요액 : ('10/11) 807억원 → ('14/15) 2,381억원 → ('16/17) 3,011억원 → ('17/18) 552억원
- 이 밖에 매몰비용 및 매몰지 관리비용 추가 지출

오리산업은 그간 오리농가의 시설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AI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그러나 산업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사육제한 등 오리의 입식을 금지해 AI를 예방하려는 임시방편적 탁상행정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AI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오리농가의 사육시설을 개편해 나가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오리사육시설, AI에 영향 얼마나 미칠까

실제 오리농가와 닭농가의 AI 발생비율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닭은 57.9%(380건), 오리 39.2%(257건) 비율로 닭보다 오리에서 AI 발생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닭 농가가 오리농가에 비해 5배 가량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오리농가의 AI 발생비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가설건축물이 AI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될까? 전체 오리 축사를 유형별로 나누고 이들의 AI 발생을 비율로 나타내면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로 된 오리

◆ 축종별 AI 발생현황

구분	'03/'04	'06/'07	'08	'10/'11	'14/'15	'16/'17	'17/'18	총계	비율	
	발생건수 (비율)									
닭 (380)	산란계	7(36.8)	2(28.6)	39(39.8)	10(18.9)	8(21.1)	153(36.5)	7(31.8)	226	34.5
	총계	1(5.3)	2(28.6)	4(4.1)	4(7.5)	5(13.2)	24(5.7)	-	40	6.1
	육계	1(5.3)	-	-	2(3.8)	-	10(2.4)	-	13	2.0
	토종닭	-	-	36(36.7)	2(3.8)	3(7.9)	59(14.1)	1(4.5)	101	15.4
	소계	9(47.4)	4(57.1)	79(80.6)	18(34.0)	16(42.1)	246(58.7)	8(36.4)	380	57.9
오리 (257)	육용 오리	1(5.3)	-	17(17.3)	23(43.4)	9(23.7)	125(29.8)	9(40.9)	184	28.0
	종오리	8(42.1)	2(28.6)	1(1.0)	10(18.9)	12(31.6)	35(8.4)	5(22.7)	73	11.1
	소계	9(47.4)	2(28.6)	18(18.4)	33(62.3)	21(55.3)	160(38.2)	14(63.6)	257	39.2
기타 (19)	기타	1(5.3)	1(14.3)	1(1.0)	2(3.8)	1(2.6)	13(3.1)	-	19	2.9
계 (656)		19(100)	7(100)	98(100)	53(100)	38(100)	419(100)	22(100)	656	100.0

오리축사 유형별 AI발생현황

구분	2016/2017		2017/2018	
	발생 농가수	발생 비율	발생 농가수	발생 비율
가설건축물 계	114	71.3%	12	85.7%
비닐하우스	63	39.4%	8	57.1%
가설건축물형 건축물	51	31.9%	4	28.6%
판넬형	36	22.5%	2	14.3%
기타	10	6.3%	-	-
계	160	100%	14	100%

축사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가 AI가 발생한 오리 농가 중 80%를 넘기는 것이 수치로 확인 된 바 있다.

전국 911호 오리 농가 중 695농가가 비닐하우스 형 축사에서 오리를 사육하고 있다. 이는 전체의 76.3%에 해당한다. 오리업계는 물론 방역전문가들도 생산성이 떨어지고 방역에 취약한 비닐하우스 형태의 오리 축사를 무창축사 등 현대화시설로 전면 개편하기 위해 축사시설의 신축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

한 방역전문가는 “2017~2018년까지 실시한 겨울철 휴지기제는 임시방편으로 AI 방역효과, 오리산업 육성 등을 고려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며 “근본적인 AI 방역개선을 위해 비닐하우스형 축사에서 오리 사육을 금지하되 농가가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리 시설 개선, 농가 스스로는 어려워

현장에 따르면 오리농가의 비닐하우스형 축사 3,300㎡(1,000평)을 현대화 시설로 개편하려면 약 10억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비용과 회수기간이 길어 농가 스스로 시설을 개선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전액 자부담시 총수익상환기간은 12.6년에 달하고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상환하면 기간은 21.4년으로 늘어난다. 이는 육계농가가 8.9년인 것과 비교하면 2.4배가량 오래 걸리는 것이다.

오리업계는 오리 사육환경 개선이 휴지기제 보다 AI 방역효과 및 오리산업 육성에 유리한 AI방역 근본대책으로 보고 한시적 보조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리협회의 한 관계자는 “현행 국고보조 30%, 용자 50%, 자담 20%로 진행되고 있는데 국고 30%, 지방비 30%, 자담 40%로 사실상 자담에 속하는 용자의 비율을 낮춰야 한다”며 “예산편성에 따라 유예기간을 두고 축산법상 시설기준 및 준수 의무를 마련하는 한편 신규축사는 2026년부터 적용하고 기존축사는 2031년부터 의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닐하우스형 축사]



[샌드위치판넬형 축사]



[트러스형 축사]



지역별 오리농가 축사형태 실태조사 결과

-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오리자조금) 결과보고서 발췌 (2019. 6. 26)

충청북도

구분	농가수	비율
비닐하우스	58	47.9%
샌드위치 판넬형	34	28.1%
기타	29	24.0%
계	121	100%

<음성군 현황>

정읍시 관내 53호 오리농가 중 **24호(45.2%)**가 비닐하우스형 가설건축물

- 하우스형 : 24호 (45.2%)
- 샌드위치 판넬형 : 14호 (26.4%)
- 기타 : 15호 (28.3%)

<진천군 현황>

진천군 관내 38호 오리농가 중 **17호(44.7%)**가 비닐하우스형 가설건축물

- 하우스형 : 17호 (44.7%)
- 샌드위치 판넬형 : 12호 (31.5%)
- 기타 : 9호 (23.6%)

충청남도

구분	농가수	비율
비닐하우스	16	50.0%
샌드위치 판넬형	4	12.5%
기타	12	37.5%
계	32	100%

<천안시 현황>

천안시 관내 16호 오리농가 중 **8호(50%)**가 비닐하우스형 가설건축물

- 하우스형 : 8호 (50%)
- 샌드위치 판넬형 : 1호 (6.3%)
- 기타 : 7호 (43.7%)

전라북도

구분	농가수	비율
비닐하우스	193	81.4%
샌드위치 판넬형	18	7.6%
기타	26	11.0%
계	237	100%

<고창군 현황>

고창군 관내 41호 오리농가 중 **39호(95.1%)가 비닐하우스형** 가설건축물

- 하우스형 : 39호 (95.1%)
- 샌드위치 판넬형 : 1호 (2.4%)
- 기타 : 1호 (2.4%)

<정읍시 현황>

정읍시 관내 56호 오리농가 중 **40호(71.4%)가 비닐하우스형** 가설건축물

- 하우스형 : 40호 (71.4%)
- 샌드위치 판넬형 : 10호 (17.9%)
- 기타 : 6호 (10.7%)

<부안군 현황>

부안군 관내 50호 오리농가 중 **40호(80%)가 비닐하우스형** 가설건축물

- 하우스형 : 40호 (80%)
- 샌드위치 판넬형 : 6호 (12%)
- 기타 : 4호 (8%)

<김제시 현황>

김제시 관내 15호 오리농가 중 **12호(80%)가 비닐하우스형** 가설건축물

- 하우스형 : 12호 (80%)
- 기타 : 3호 (20%)

전라남도

구분	농가수	비율
비닐하우스	321	74.1%
샌드위치 판넬형	61	14.1%
기타	51	11.8%
계	433	100%

<나주시 현황>

나주시 관내 96호 오리농가 중 **73호(76%)가 비닐하우스형** 가설건축물

- 하우스형 : 73호 (76%)
- 샌드위치 판넬형 : 11호 (11.4%)
- 기타 : 12호 (12.5%)

〈영암군 현황〉

영암군 관내 78호 오리농가 중 71호(91%)가 비닐하우스형 가설건축물

- 하우스형 : 71호 (91%)
- 샌드위치 판넬형 : 5호 (6.4%)
- 기타 : 2호 (2.5%)

〈장흥군 현황〉

보성군 관내 46호 오리농가 중 20호(43.4%)가 비닐하우스형 가설건축물

- 하우스형 : 20호 (43.4%)
- 샌드위치 판넬형 : 13호 (28.2%)
- 기타 : 13호 (28.2%)

〈무안군 현황〉

무안군 관내 28호 오리농가 중 22호(78.5%)가 비닐하우스형 가설건축물

- 하우스형 : 22호 (78.5%)
- 샌드위치 판넬형 : 2호 (7.1%)
- 기타 : 4호 (14.2%)

〈강진군 현황〉

강진군 관내 24호 오리농가 중 11호(45.8%)가 비닐하우스형 가설건축물

- 하우스형 : 11호 (45.8%)
- 샌드위치 판넬형 : 9호 (37.5%)
- 기타 : 4호 (16.6%)

〈고흥군 현황〉

고흥군 관내 16호 오리농가 중 13호(81.2%)가 비닐하우스형 가설건축물

- 하우스형 : 13호 (81.2%)
- 샌드위치 판넬형 : 2호 (12.5%)
- 기타 : 1호 (6.2%)

경기도

구분	농가수	비율
비닐하우스	21	63.6%
샌드위치 판넬형	6	18.2%
기타	6	18.2%
계	33	100%

〈안성시 현황〉

안성시 관내 20호 오리농가 중 15호(75%)가 비닐하우스형 가설건축물

- 하우스형 : 15호 (75%)
- 샌드위치 판넬형 : 3호 (15%)
- 기타 : 2호 (10%)